

정의장, '담뱃세 인상' 등 14개 예산부수법안 지정

與 “예산안과 함께 12월 2일 본회의 처리”

野 “서민증세 위한 ‘날치기’ 수순” 강력 반발

정의화 국회의장이 26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총 14건의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했다.

최형두 국회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하고 “예산부수법안 지정 사실을 5개 관련 상임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여야 간 합의가 없어도 예산안 자동처리 시점인 내달 2일 예산안과 함께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다.

상임위별 예산부수법안은 기획재정부 26건, 교문위 2건, 안행위 1건, 산업위 1건, 복지위 1건 등 31건이다. 그러나 같은 이름의 법률 개정안이 포함돼 있어 실제 예산부수법안은 총 14개다.

정 의장이 지정한 예산부수법안에는 담뱃세 인상안을 비롯해 기업소득환류세제,

임대주택 분리과세와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 등 야당이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다수의 세법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분리과세를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대책의 보완 조치로 지난 6월 당정이 합의한 내용이다. 조세소위는 현재 관련 법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야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예산부수법안이 됐다. 이 법안도 조세소위에서 야당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도 예산부

수법안에 올랐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목에 들어가 있는 이 법안은 조세소위 야당 의원들이 대기업 특혜 폐지를 위해 처리를 반대하는 대표적인 법안 중에 하나다.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조세법도 조세소위에서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지만 예산부수법안에 지정됐다. 관련 법안은 여야가 잠정합의에 이렇다가 25일 야당의 반대로 재논의에 들어간 상태다.

가장 논란이 됐던 담뱃세 인상안도 예산부수법안에 선택됐다.

최형두 대변인은 “담뱃세 관련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원칙적으로 세입예산 부수법물안 대상이 아니지만 해당 지방세의 개정으로 ▲내년도 국가수입 증감액이 발생하고 그 증감액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국세수입 관련 법률안과 직접 연계되어 있어 함께 처리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담뱃세 인상안과 관련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명시됐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정 의장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이날 지정된 예산 부수법안의 시한 내 통과를 촉구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반대해 온 담뱃세 관련법의 포함에 ‘서민증세 꼼수’라며 강력 반발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의장이 고유의 권한을 행사해서 내린 결정인 만큼 존중한다”며 “새해 예산안과 오늘 지정된 14개 예산 부수법안들은 12월2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서민증세를 위한 또 하나의 날치기 수순”이라면서 “정부가 담뱃세에 개별소비세를 일부 부과하고, 국회의장이 이를 근거로 예산부수법안에 올린 것은 다수의 말 못하는 서민을 등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공무원연금개혁 연내 처리 ‘빨간불’

野, 내년 4월 검토...與 “상정 막는 것 옳지 못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놓고 여야의 대치가 구체화하면서 개혁안의 연내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전날 관련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에서 야당의 반대로 여당의 개혁안 상정이 무산된 데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년 4월에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 원내 핵심 관계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연금안에 대해서 충분히 시간을 두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내년 2월에 당내에서는 전당대회가 있고, 당장은 사자방 국정조사 등도 변수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내년 4월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공적연금발전 TF’ 위원장인 강기정 의원은 “우선 사회적합의기구를 만들어야 하고, 거기서 수급자인 공무원들과 세부적인 부분까지 의논해

야 한다”며 “시기를 못박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내년 4월까지 이 작업을 모두 마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얘기로 들린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또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회견을 열고 “연금안은 정부와 공무원이 합의하는 것이 첫 단계인데, 사회적 합의기구도 없이 야당안을 내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상정이 무산된 데 대해 야당을 강력히 성토했으며 새정치연합에 공무원연금 개혁 자체안을 조속히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김부성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새누리당 158명이 공동발의한 법안을 국회에서 상정조차 못하고 논의의 통로를 막는 것은 정말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옳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지원 “친노-비노 무한대립 구도 깨는 것이 최고 혁신”

전남대서 ‘호남정치 복원’ 특강

당권·대권 분리

완전 국민경선 주장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26일 ‘7년 동안 반복되고 있는 ‘친노-비노’의 무한대립 구도를 깨는 것이 최고의 정치 혁신’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전남대 융복합홀에서 열린 민생평화광장과 전남대 5·18 연구소 주최 초청 특강 ‘호남 정치 복원,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주제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특히 강연에서 “호남의 정치력을 결집시켜 민주주의, 서민경제와 복지, 평화 통일을 추구하는 진정한 호남 정치를 복원하겠다”면서 당 대표 도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반기문 대명론과 안철수 태풍의 진원지가 호남이고,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의 당선에서 볼 수 있듯이 호남 민심이 새정치민주연합에 준엄한 경고를 하고 있다”면서 “호남 민심은 독점과 분열을 끝내고 정권교체의 희망을 제시하는 통합의 리더십을 갈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호남인과 호남 당원들에게 당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일방적인 회생을 요구하거나 호남 정치를 복원한다는 명목으로 분열을 부추기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26일 광주 북구 전남대 융복합홀에서 ‘호남정치 복원, 무엇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는 것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호남 정치는 지역주의 부활 또는 호남패권주의가 아닌 ‘약무호남 시무국가’의 정신, 즉 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는 무한 책임, 무한 헌신의 정신”이라며 “민주주의, 서민경제와 복지, 평화통일이 호남 정치의 본질이고 이것이 곧 당의 정체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저는 당원과 호남 정치인의 일원으로서 내년 2·8 전당대회에서 당을 살리고, 정권교체의 비전을 제시할 역사적인 세 번째 기회를 준비할 것을 제안 한다”면서 “집권을 위해 당권과 대권을 분리해서 당을 안정시키고 대권 후보들의 검증과 경쟁이 필요하다”고 당권과 대권 분리를 주장했다.

박 의원은 당의 혁신을 위한 과제로 “계파 갈등을 양산하는 공천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자결심사위원회에서 후보자의 자격만 심사하는 당원 추천형 완전 국민경선이 필요하다”며 “중앙당의 권한을 내려놓고 시도당 분권화도 전면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순천만정원 국가정원 지정 관련법 소위 통과

순천만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관련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림위) 법률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국회 농림위에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수목원법)’이 재상정돼 통과됐다고 26일 전했다.

이 법안은 지난 24일 농림위 법안소위에서 보류결정이 났으나, 김 의원이 적극적으로 동료 의원들을 설득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김 의원은 “순천만정원의 국가정원화는 순천시민의 염원이 담긴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자 순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역량을 모으고 있다”며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사를 남겨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반드시 수목원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안소위에서 수목원법은 당초안에서 국가정원 지정권자와 정원 진흥정책 추진권자가 ‘산림청장’에서 ‘국가’로 변경돼 통과됐다.

관련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가에서 보류결정이 났으나, 김 의원이 적극적으로 동료 의원들을 설득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정치, 수능대책특위 구성...위원장 안민석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오류 사태와 관련, 당 차원의 대책기구를 만들어 수능 시험을 포함한 교육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위원장에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3선의 안민석 의원이 임명됐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지속된 수능시험 정답 오류 사태는 박근혜정부 무능의 결정판”이라며 “20년 묵은 수능 체제를 단편적으로 손질하기보다 교육제

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내 수능대책특별위를 구성, 수능을 비롯해 교육제도 전반에 걸친 개편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들쭉날쭉 난이도에 출제 오류까지 수능체제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며 “한두 문제 차이로 인생이 바뀌고 해마다 수능점수를 비관해 아이들이 자살하는 수능체제가 결코 정정판”이라며 “20년 묵은 수능 체제를 단편적으로 손질하기보다 교육제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1인당 한도 **최고 28억원까지 가능**
아파트 담보, 분양진금 대출 연말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임대보증금대출 정부정책자금대출
 신용대출, 상가대출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서양새마을금고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2015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입생 모집

대학원

특별전형 (신학대학원 지원자로서 신학관련 학과만 해당됨)

① 원서접수 : 2014. 11. 10(월) ~ 11. 21(금)
② 전 형 일

대학원	과정	모 집 학 과	전 형 일 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11.25(화) 오후 4:00~
		신학과(M.Div.)	11.25(화) 오후 4:00~

일반전형

① 원서접수 : 2014. 12. 1(월) ~ 12. 9(화)
② 전 형 일

대학원	과정	모 집 학 과	전 형 일 시
일반대학원	석사	신학과(Ph.D.)	12.12(금)오전10:00~
		신학과(Th.M.)	
		신학연구학과(M.A.T.)	12.13(토)오후 3:00~
		유아교육학과(M.Ed.)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12.12(금)오전10:00~
교육대학원	석사	교육학과(M.Ed.)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12.13(토)오후 3:00~
광성교육대학원	석사	광성교육학과(M.Ed.)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원학과(M.A.)	

학 부

정시모집

①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 학 과	12
	국제한국어교원학과	3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2
사범	유아교육과	3
예능	음악학과	5
	실용음악학과	3

※ **음악학과 전공** ▶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래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 **실용음악학과 전공** ▶ 트럼, 기타(포크기타, 일렉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어(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② 원서접수 : 2014. 12. 19(금) ~ 24(수)
③ 전 형 일 : 2015. 1. 6(화)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혁신로 36
입학문의 ▶ 대학원 062) 605-1115 학부 062)605-1114